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9-06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 12

AI와 청렴윤리경영

2025 December | vol.156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12월 1일(매월발행, 통권 156호, 비매품)

발행인: 유철환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3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일반민원, 부패공익신고

**☎110**

부패공익신고 상담

**☎1398**

## COVER STORY

AI 기술은 최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과 ESG, 내부통제 영역에서도 효율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AI는 대량의 정보 처리와 분석을 통해 윤리·준법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윤리 판단이나 책임을 대신하는 수단은 아니다. 일부 글로벌 보고서들은 AI 도입 과정에서 기술 활용과 함께 조직의 기준과 운영 체계,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이 청렴윤리경영 및 ESG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할 때,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목 차

---

01	<b>전문가 코칭</b> AI 거버넌스와 기업윤리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상욱 교수
02	<b>보고서 리뷰</b> 공공 부문 AI 활용 현황과 거버넌스 OECD,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2025)
03	<b>사례 돋보기</b> AI 및 기술 윤리 사례 -CJ올리브네트웍스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04	<b>문화 속 기업윤리</b> 기술의 합법적 사용과 윤리의 경계   영화, '미키17'
	<b>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b> [권익위 정책] ·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권익위 활동] ·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공정채용 위반 총 832건 적발 ·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 지급
05	<b>윤리, 지금</b> 국내외 동향 [정책] · EU, 새로운 반부패 지침 합의 · 영국 SFO,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해외 뇌물수수탐지 지표 첫 공동 발표 [ESG] · 공시 강화·상법 개정...내년 화두는 지배구조 · 대·중견기업 공급망 ESG 확산...관리활동 3년 연속 상승 · 기재부,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첫 마련 [AI윤리] · AI 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워터마크·고영향 AI 규제
06	<b>웹툰 윤리네컷</b> 청렴윤리경영을 돕는 AI
07	<b>행사소식</b>
08	<b>안내</b>
09	<b>독자 의견</b>

---

## AI 거버넌스와 기업윤리



이번 호에서는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상욱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AI 규범, 윤리 거버넌스와 기업윤리경영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최근 1~2년 사이 AI 관련 규범(예: EU AI Act)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변화는 “기술 규제”라기보다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재정의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흔히 윤리와 규제는 기술 혁신과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규제 때문에 혁신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으니 적당한 수준에서 절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유럽의 AI 규제가 유럽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고 그에 비해 미국은 규제가 하나도 없어서 인공지능 혁신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조차도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AI의 역기능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여러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유럽도 AI 기술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많은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I 관련 규범 및 규제와 혁신은 서로 함께 가야할 동반자이지 서로 상충하는 지향점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지점은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특징이 그 기술적 내용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와 같은 ‘성숙된 기술’의 경우 그 기술을 어떻게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잘 합의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AI와 같은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미성숙 기술’은 이런 기준이 아직 마련되기 전이어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이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만들어 배포한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이에 대해 해당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당연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I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과 관련하여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2. 기업이 “AI 윤리 거버넌스”를 갖춘다고 할 때, 산업/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포함돼야 할 최소 요소 2~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기업이 AI 관련 여러 결정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했고 누가 고려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3자(예를 들어 소비자나 사회적 감독기관)가 실시간 혹은 사후적으로 검토 및 감사(audit)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투명성의 가치가 기업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되면 적어도 기업은 SI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에서 그것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절차적으로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 숙고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SI 윤리 거버넌스의 실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핵심가치 존중입니다. 대개 기본 인권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보편적 가치와 한국 사회에 고유한 특수 가치를 포함하여)를 최대한 지켜가면서 SI의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물론 핵심가치 존중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핵심가치만이 절대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가치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과 공정성 보장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SI 관련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존중은 기술적 탁월함, 효율성 등 사회적으로 존중되는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맞교환(tradeoffs)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안전(safety)입니다. 이 가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에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SI의 성능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SI가 우리의 통제범위 내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SI가 안전한 기술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SI 기술이 '성숙된' 기술로서 사회 전체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음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SI의 안전성에 대한 강조는 초지능처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을 벗어나는 미래 시나리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선량한 목적, 예를 들어 신약후보물질 탐색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이 아주 작은 수정만으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독성물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즉 이중 사용(dual use)의 문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인간을 속이거나 협박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적당한 조건' 하에서는 인간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점도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특히 SI 에이전트가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Q3. AI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윤리·준법 투자가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이며, 한국 기업이 '윤리·신뢰'를 기반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 영역과 지금 준비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술 기업의 경쟁력은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일 겁니다. 하지만 AI 기술기업이라면 여기에 '윤리·신뢰 역량'과 '제도대응 역량'이 추가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국제 AI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는 아직 국제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윤리 기준이나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기업은 자신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국가의 윤리 기준이나 제도적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세계 각국의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기준, 특히 문화, 종교, 사회적 관습 등을 잘 고려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첫째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AI 기술 강국 사이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할 때 당분간 우리가 기술 수준이나 가격경쟁력에서 미국과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기업들은 각국의 고유한 데이터 주권 문제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특수성을 '자상하게'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기술이 최고니 우리가 주는대로 (필요하면 자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AI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라는 식입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기술적으로도 미국에 버금가고 가격경쟁력에서 압도적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 민감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거나 수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백도어'를 만들어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로 국가안보나 핵심적 산업 인프라에 미국이나 중국 AI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중진국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미국 빅테크가 자국에서 돈을 벌며 가면서 자국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저개발국의 이유있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좋은 기술과 꽤 괜찮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이 앞서 강조한 윤리적 감수성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존중을 전면에 내세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전략을 활용하여 인상적인 성과를 올린 국산 무기 수출의 성과는 이런 의미에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하지 못하는 문화적, 윤리적 감수성과 상대국의 데이터 주권 및 보안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는 윤리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 부문 AI 활용 현황과 거버넌스



OECD,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2025)

(이 글을 읽는데 약 5분이 소요됩니다.)

OECD에서 발간한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2025)' 보고서는 전 세계 정부가 AI를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뢰 중심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200여개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특히 **사기 방지와 이상 징후 탐지, 공공조달(Procurement) 과정의 위험관리-감독**에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책임 있는 기술 도입을 위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정부의 AI 활용 현황 및 기술적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정부의 11개 핵심 기능을 대상으로 총 200개의 AI 활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AI 활용은 **공공 서비스, 시민 참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반면 정책 평가, 세무 행정, 공무원 관리 분야에서는 AI 활용 사례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조달, 재정 관리, 부패 방지 및 공공 청렴성 분야는 이들 사이의 중간 수준 활용도를 보이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례 중 57%는 행정 프로세스와 공공서비스의 자동화·간소화·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44%는 의사결정 개선, 정보 해석(sense-making), 예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9%는 책임성 강화 및 이상 징후 탐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반면,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AI 시스템을 외부 이해관계자(시민·기업 등)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사례는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AI 활용은 정부 내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 측면에서는 정부의 AI 활용이 여전히 규칙 기반 시스템이나 기존 머신러닝(ML) 기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포함한 생성형 AI의 활용은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데이터 보안과 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전히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한다. 이는 정부 부문에서 AI가 비교적 통제 가능하고 위험이 낮은 영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 주요 활용 사례: 공공조달 및 감사

OECD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AI 활용 사례도 함께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공공조달과 사기 방지 분야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AI를 활용한 공공조달 사기·이상 징후 탐지〉

브라질 연방감사원(TCU) – ‘Alice’ 시스템
<p>Alice는 브라질 연방감사원이 운영 중인 AI 기반 공공조달 감시 시스템을 말한다.</p> <p>Alice는 연방정부의 입찰·계약 데이터를 상시 분석해 반복 낙찰, 경쟁 부족 입찰, 비정상적 계약 변경 등 사기나 비효율 가능성이 있는 패턴을 조기에 탐지한다.</p> <p>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자동 경고되며, 감사관은 이를 토대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추가 점검이나 개입을 검토할 수 있다.</p>

[출처: OECD,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2025)]

〈생성형 AI를 활용한 감사·청렴 업무 지원〉

브라질 연방회계법원(TCU) – ‘ChatTCU’
<p>ChatTCU는 브라질 연방회계법원이 내부 감사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생성형 AI 도구이다. ChatTCU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감사관이 자연어로 질의할 경우 관련 법령, 과거 감사 보고서, 유사 사례 등을 요약·정리해 제공한다.</p> <p>이 도구는 감사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모든 결과는 감사관의 검토를 거쳐 활용된다.</p>

[출처: OECD,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2025)]

OECD는 이 사례들을 통해 생성형 AI가 청렴·감사 영역에서 AI가 공공부문에서 사전 예방, 위험 탐지, 정보 정리, 업무 효율화 역할을 함으로써 지식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보고서는 이 시스템들이 위법 여부나 제재를 판단하지 않고, 감사 대상 선별과 우선순위를 설정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는 등 판단과 책임은 인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

OECD는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의 핵심은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활용 범위의 명확화와 책임 구조의 확립에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의 6대 원칙을 제시한다.

〈OECD 핵심 AI 거버넌스 원칙〉

<b>책임성(Accountability)</b>	<p>AI가 개입된 결정의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해야 합니다.</p> <p>AI는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과 책임은 인간과 조직에 귀속되어야 합니다.</p>
----------------------------	---

<b>투명성(Transparency)</b>	AI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데이터와 방식을 통해 작동하는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AI 사용 사실 자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b>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b>	AI의 분석 결과나 권고가 왜 그렇게 도출됐는지 이해·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불가능한 알고리즘은 공공 신뢰를 저해하고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습니다.
<b>인간 중심·인간 개입 (Human-in-the-loop)</b>	AI는 판단자나 결정권자가 아니라 위험 탐지·정보 정리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필요 시 인간이 개입·중단·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b>공정성 및 비차별 (Fairness)</b>	편향된 데이터나 설계로 인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탐지·감사·조달 분야에서는 과도한 오탐·차별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b>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Data Protection &amp; Governance)</b>	AI 학습·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적법성·목적 적합성·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민감정보를 다루는 경우 데이터 결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b>비례성 및 위험 기반 접근 (Proportionality &amp; Risk-based approach)</b>	모든 영역에 동일한 수준의 AI를 적용하기보다, 위험이 낮고 효과가 큰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출처: OECD,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2025)]

보고서는 AI 도입 시 데이터 파편화, 전문 인력 부족, 노후화된 시스템과 같은 현실적 장벽을 직시할 것을 언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AI가 의미 있는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에 앞서 리스크 기반의 유연한 안전장치(Guardrails)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보고서의 분석은 AI를 활용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는 조직에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기술 도입에 앞서, OECD가 제시한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원칙과 실제 사례를 이정표 삼아 조직 내 의사결정 기준과 책임 구조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데 해당 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 참고

OECD,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2025)

## AI 및 기술 윤리 사례

AI 기술은 마케팅, 데이터 분석, 내부 의사결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어떤 기준으로 AI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기업의 중요한 윤리·거버넌스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례돋보기에서는 AI 윤리 원칙을 제도화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한 국내외 기업 사례를 통해, AI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국내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올리브네트웍스 또한 기업별 환경에 최적화된 AI테크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간 중심의 AI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AI 윤리원칙'을 2021년 11월 선포했다. 이 AI 윤리원칙은 AI를 활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는 제공할 때 구성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들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 <CJ올리브네트웍스 AI 윤리원칙>

 <p><b>건강, 즐거움, 편리를 위한 AI</b> CJ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목적으로 인간 중심의 AI를 개발하고 활용합니다.</p> <p>#인간중심 #인류행복추구</p>	 <p><b>다양성이 존재하며 차별과 편향이 없는 AI</b> CJ는 세계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을 추구합니다.</p> <p>#다양성 #포용성 #공공성</p>	 <p><b>설명 가능한 AI 추구</b> CJ는 제공하는 AI 기술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경직하게 설명하고 선택권을 부여하여 투명한 신뢰 관계를 형성합니다.</p> <p>#다양성 #신뢰성</p>
 <p><b>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AI</b> CJ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정보보안 원칙 하에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합니다.</p> <p>#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소재 명확화</p>	 <p><b>AI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b> CJ는 당사의 발전과 AI산업 발전을 함께 추구하며,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p> <p>#교육 #지식공유(공공성)</p>	

[출처: CJ올리브네트웍스 홈페이지 | [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ai\\_ethics](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ai_ethics)]

한편, CJ올리브네트웍스는 ESG 경영의 기반으로 "우리는 ONLYONE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로 이해관계자들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미션을 두고 있으며, 핵심가치가 되는 4대 지향점 '권리의 보호', '포용의 문화', '생태계 강화', '환경친화적 접근' 중 '권리의 보호'영역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 기술윤리 제정과 준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룬다.

〈ESG경영 전략체계-권리의 보호〉

## 권리의 보호

우리는 기업 윤리를 토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온라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개발의 윤리적 원칙을 세워 책임감 있게 준수합니다



전략과제	과제 정의	중점 추진 사항	UN SDGS
개인 정보와 데이터 보안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와 내재화	- 개인정보보호 위반 건수, 피해 건수 제로 - 대내외 건강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기여	
인권 존중과 보호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진행, 고충 처리 절차 마련 및 조치 이행 등 임직원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 환경 제공	- 인권 경영 실행 체계 구축 및 내재화 - 안전 경영 체계 실천 및 중대 재해 예방	
기술 윤리 제정과 준수	기술 개발로 인해 사회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책임감 있게 준수	- AI윤리원칙 임직원 교육 및 준수 - 기술 윤리 행동 강령/정책 제정 및 임직원 교육 -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체계 마련	

[출처: CJ올리브네트웍스 홈페이지 | [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esg\\_overview](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esg_overview)]

또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술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준수하고 있다. 기술 윤리 헌장은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의 3가지 이해관계자 별로 준수해야 할 4가지 공통원칙(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으로 구성된다. 그 중 기술의 활용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원칙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CJ 올리브네트웍스 기술 윤리 헌장-투명성〉

<b>4. 투명성</b>	
- 우리는 기술개발, 서비스 설계, 제품 기획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이용 단계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b>개발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위급 상황 발생시, 필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협력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안전에 관한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은닉 기능을 개발하지 않습니다.</li> <li>■ 제품 및 서비스의 작동이나 활용이 수반하는 다양한 결과와 예상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예측의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시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알립니다.</li> </ul>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으로 인해 도출된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이용자와 일반인들에게 고지 및 공유합니다.</li> <li>■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li> <li>■ 제품 및 서비스가 삶의 질과 직결된 영역에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기술 개발 및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li> </ul>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기술 또는 기능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개발자나 공급자에게 요구하며, 그러한 특정 기술 또는 기능이 이용 과정에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술 또는 기능의 사용 계획을 철회합니다.</li> <li>■ 기술이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처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합니다.</li> <li>■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시 이상 현상과 부작용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소비자로서 습득한 경험과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합니다.</li> </ul>

[출처: CJ올리브네트웍스 홈페이지 | [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tech\\_ethics](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tech_ethics)]

##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IT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글로벌 AI 표준을 구축하는데 참여하는 기업으로 '책임있는 AI 투명성 보고서'(Responsible AI Transparency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2024년 6월에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 내 모델 리더보드에 안전성 등급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각 AI 모델의 리스크 수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책임있는 AI 투명성 보고서'는 2024년 5월 첫 발간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AI 시스템을 책임감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구축하고 배포하는 방법, 고객을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학습하고 발전하는 방식 등 새로운 개발 사항들을 담았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개발·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책임있는 AI(Responsible AI)'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정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투명성, 책임성을 6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RAI 표준(Responsible AI Standard)<sup>1</sup>, 사전 위험평가, 레드팀 테스트<sup>2</sup>, 배포 전 심의 절차를 운영한다.

<sup>1</sup> 마이크로소프트가 6대 AI 원칙을 제품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수립한 내부 규정(Internal Framework).

<sup>2</sup> 조직의 보안이나 윤리적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격자 역할을 수행하는 팀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방식

마이크로소프트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임감있는 AI표준'을 공유하고 AI윤리 원칙에 따른 개발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게시한다.

### 〈AI윤리 원칙 6가지〉

## 중요한 사항 정의

AI 개발 및 사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6가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p><b>▶</b></p> <p><b>공정성</b></p> <p>AI 시스템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p> <p>AI 시스템은 어떻게 기회, 리소스 및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할당할 수 있을까요?</p> <p><b>실행 중인 공정성 보기</b></p>	<p><b>🛡️</b></p> <p><b>안정성 및 안전성</b></p> <p>AI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p> <p>시스템이 원래 의도되지 않았던 조건과 컨텍스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용 조건 및 컨텍스트에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p> <p><b>실행 중인 안정성 및 안전성 보기</b></p>	<p><b>🔒</b></p> <p><b>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b></p> <p>AI 시스템은 안전하고 개인 정보를 존중해야 합니다.</p> <p>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p> <p><b>실행 중인 개인 정보 및 보안 보기</b></p>
<p><b>👥</b></p> <p><b>포용성</b></p> <p>AI 시스템은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야 합니다.</p> <p>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포용하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p> <p><b>실행 중인 포용성 보기</b></p>	<p><b>🗣️</b></p> <p><b>투명성</b></p> <p>AI 시스템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사람들이 시스템의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b>실행 중인 투명성 보기</b></p>	<p><b>🤝</b></p> <p><b>책임</b></p> <p>사람들은 AI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p> <p>인간이 책임을 지고 제어할 수 있도록 감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b>실행 중인 책임감 보기</b></p>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 <https://www.microsoft.com/ko-kr/ai/principles-and-approach>]

또한 책임있는 AI와 관련된 정책 및 내부정책 연구, AI확산 및 이용현황 분석, 산업, 기술 연구 등을 진행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및 공유하고 있으며, EU AI Act 등 글로벌 규제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참고

CJ올리브네트웍스 AI 윤리원칙 | [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ai\\_ethics](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ai_ethics)

CJ올리브네트웍스 ESG | [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esg\\_overview](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esg_overview)

CJ올리브네트웍스 기술 윤리 현장 | [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tech\\_ethics](https://www.cjolivenetworks.co.kr/sustainability/tech_ethics)

Microsoft blog |

<https://blogs.microsoft.com/on-the-issues/2025/06/20/our-2025-responsible-ai-transparency-report/>

Microsoft Learn, "Red teaming for generative AI models" |

<https://learn.microsoft.com/en-us/azure/ai-services/openai/concepts/red-teaming>

Microsoft, "Responsible AI Standard, v2" |

<https://query.prod.cms.rt.microsoft.com/cms/api/am/binary/RE5cmFI>

시사오늘, "[IT오늘] CJ올리브네트웍스, IT서비스 최초 AI 원칙 정립…카카오, 블로컴터와 UAM 상용화 협약"(2021.11.23)

연합뉴스, "[AI픽] CJ올리브네트웍스, 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 강화 '눈길'"(2025.12.18)

## 기술의 합법적 사용과 윤리의 경계, 미키 17



〈이미지 출처: IMDb〉

영화 '미키 17'은 복제 인간이라는 설정을 다루는 영화다.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기억 데이터까지 보존되어 프린트된다. 영화 속 설정에 의하면 이러한 인간 복제 기술은 각종 범죄 악용 우려와 생명 윤리에 위배되는 등 윤리적인 이유로 지구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예외다. 복제인간은 '익스펜더블'로 불리며, 다른 행성 개척 시 인간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고 대원들이 말기에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거나 실험체라는 명목으로 이용된다.

익스펜더블에 자원한 주인공 미키의 생명은 재생되기 때문에 점점 존중받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가 다양한 방식을 죽을 때마다 몸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용광로에서 재활용되고, 기억과 신체는 프린터처럼 다시 출력된다.

신기술에 대한 윤리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하다는 명목으로 윤리는 보류된다. 예외조건이 덧붙여지면서, 익스펜더블의 생명은 비용 구조 안에서 계산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되었다.

사람들은 미키에게 묻는다.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미키의 죽음을 가볍게 만든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비극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하나의 직무 과정이자, 반복 가능한 데이터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명확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조직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술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작동한다. 그리고 그 효율성 속에서 윤리성은 점점 고려되지 않고 밀려난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AI와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2024년에 가트너(Gartner)가 발표한 '2025년까지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등에서는 AI 윤리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사전적 윤리 기준과 거버넌스가 더욱 중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AI가 효율과 혁신을 가져온다고 해서, 인간의 판단 기준과 윤리적 통제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도입·개발되는 기술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윤리 원칙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윤리는 효율과 속도 앞에서 조정 가능한 조건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기준인가. 영화 '미키 17'은 이 질문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 참고

사이언스타임즈, "2025년 전략기술 키워드, AI·신뢰성·지속가능성"(2024.12.24) |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47?nscvrgSn=259776>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 권익위 정책

####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을 기반으로 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수준(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 평가)을 합산해 산출됐다.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5개 유형 모두에서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450개 기관 평균 점수는 81점으로 전년보다 0.7점 상승했다. 이는 2022년 평가체계 개편 이후 첫 상승세다. 다만 청렴체감도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락했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하락 폭(-0.5점)이 가장 컸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받은 27개 기관 중 66.7%에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로 전년 대비 6곳 늘었으며, 서울 광진구·전남 보성군은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지표별로 보면, 청렴체감도 평균은 79.3점(+0.1점), 청렴노력도는 84.8점(+1.3점)으로 상승했다. 부패실태 평가는 153개 기관, 390건이 반영됐으며, 감점 대상 기관과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2월 23일 [https://www.aacgk.go.kr/boardes?mid=a10402010000&cid=4A&act=view&list\\_no=102141](https://www.aacgk.go.kr/boardes?mid=a10402010000&cid=4A&act=view&list_no=102141)

### 권익위 활동

####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직유관단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을 법령,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과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비리 건수는 34건이었다. 이는 채용비리 건수가 182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81.3% 감소한 수치이며, 채용비리는 매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채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의적 합격자 결정(8건), ▲자의적 심사 진행(8건),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5건) 등 순서로 많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중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이 적발된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업무 부주의지적사항은 798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34건의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2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https://www.aacgk.go.kr/boardes?mid=a10402010000&cid=4A&act=view&list\\_no=102469](https://www.aacgk.go.kr/boardes?mid=a10402010000&cid=4A&act=view&list_no=102469)

##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2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는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모전은 '11년의 청렴발자국, 모두의 미래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부문'과 '청렴 굿즈 디자인 부문'을 신설하여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 연극·영상 부문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된 총 532점의 출품작에 대해 심사위원과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수상작 총 40점을 선정하여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작은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및 청렴콘텐츠 공모전누리집에 게시되며, 청렴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2월 11일 [https://www.aacgk/board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1588](https://www.aacgk/board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1588)

##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1467](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1467)

# 국내외 동향

## 반부패 정책

### EU, 새로운 반부패 지침 합의… “회원국 전반에 걸친 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

2024년 12월 19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EU 차원의 새로운 반부패 지침(Anti-Corruption Directive)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부패 입법 패키지로, 부패 범죄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처벌 기준, 집행 체계를 회원국 전체에 적용하는 통합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U 전역에서 통일된 부패 범죄 정의 및 처벌 기준 제시
- 최대 형량 기준 및 최소 공소시효 설정을 통해 집행 일관성 확보
- 회원국별 국가 반부패 전략, 고위공직자 규제, 위험평가 및 투명성 제고 조치 도입 의무화
- 형사처벌 외에 기업·개인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가능

이번 합의는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고위급 부패 스캔들과 시민사회의 투명성 요구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지침은 또한 각국이 독립적이고 충분한 자원을 갖춘 반부패 전담 기관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EU 차원의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그리고 연례 법치보고서(Rule of Law Reports)와 연계된 평가체계 마련 등을 요구한다. EU는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사법당국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회원국의 법 집행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PP Group 홈페이지 2025년 12월 20일 <https://www.epp.eu/en/our-agenda/anti-corruption-and-transparency>

###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해외 뇌물수수탐지 지표 첫 공동 발표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은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영미권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의 법집행기관들과 함께, 해외 뇌물수수의 위험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국제 공동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국제 해외 뇌물수사 태스크포스(IFBT, International Foreign Bribery Taskforce)의 공동 작업 결과물로, 기업과 전문가, 일반 국민이 뇌물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인 「Indicators of Foreign Bribery(해외 뇌물수수의 징후)」는 각국 수사기관의 실제 사례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고위험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기업의 준법감시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구성되었다. 지침에는 아래 유형이 위험 징후(red flags)로 명시됐다:

-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고가 부동산 자산 보유
- 기업명과 동일한 이름의 자선단체 등록
- 거래 및 계약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비밀 유지 요구
- 복잡한 법인 소유 구조를 통한 우회적 지분 보유
- 명백한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 수주

지침은 지표 하나만으로 범죄를 단정지을 수 없으며,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일부 징후는 자금세탁 등 다른 금융범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공통 위험요소라고 덧붙였다. SFO는 이번 발표가 단속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제 공조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기업, 공공기관의 위험 인식 개선과 내부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에서는 중대비리수사청(SFO) 또는 국가범죄수사청(NCA)을 통해 관련 활동을 신고할 수 있다.

- 영국정부 홈페이지 2025년 12월 22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sfcs-launch-the-five-eyes-on-foreign-bribery-indicators>

## 공시 강화·상법 개정…내년 화두는 지배구조

내년부터 기업 경영의 화두는 ESG 중 'G(지배구조)'가 될 전망이다.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고, 임원 보수와 주주수익률을 병기하는 보상 공시 요건도 강화된다. 여기에 상법 1·2 차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 요건, 집중투표제, 전자주총 도입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등 3 차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2016 년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착수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주주 권한 강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7 년 주총을 대비한 거버넌스 전략 재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한국경제 2025년 12월 21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7254?from=kakao>

## 대·중견기업 공급망 ESG 확산…관리활동 3년 연속 상승

국내 대·중견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활동이 3 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8 개사의 2024 년도 공급망 ESG 관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6 개 항목 중 평균 충족률은 지난해 42.7%에서 올해 50.4%로 상승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과 현대모비스는 15 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협력사 ESG 평가 결과를 계약·거래 시 인센티브 제공이나 페널티 부과에 활용하는 기업 비율은 58.3%로 높아졌으며, 설비 등 하드웨어 지원(28.9%), 탄소배출량 관리(24.8%), 교육(58.3%) 및 컨설팅(49.1%)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적극적 ESG 이행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 2025년 12월 15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58060>

## 기재부,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첫 마련

기획재정부는 7 월 10 일 제 11 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분야에 걸쳐 총 37 개 핵심 지표와 80 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으며, 온실가스·에너지·폐기물 등 환경관리부터 노동·인권·안전 등 사회적 책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등 지배구조 개선까지 공공기관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유도한다. 각 기관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해 필수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했으며, 기존 공시 시스템(알리오)과 연계해 실무 적용 가능성도 높였다. 특히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항목과 목표 대비 성과 분석 지표도 포함되며, 정부는 향후 ESG 공시항목 확대 및 경영평가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25년 12월 10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88991?from=kakao>

## AI 윤리

### AI 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워터마크·고영향 AI 규제

한국은 오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관련 기본법인 'AI 기본법(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에는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고지해야 하며, 시각적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표시도 의무화된다. 특히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기술문서 작성, 데이터 편향성 검증,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책임이 부과된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국내 AI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류하고, 사용자 고지 문구 삽입, 이용약관 개정, 기술적 표시 방식 도입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는 기존의 모호성과 초기 대응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계도기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2025년 12월 21일 <https://www.mk.co.kr/news/it/11497417>

## 청렴윤리경영을 돕는 AI



### KCA 세미나: 리스크 거버넌스 × 내부통제 전략 세미나

리스크 거버넌스와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두 시스템의 관계와 통합 필요성을 다루는 세미나.

- 주최: (사)한국컴플라이언스 협회(KCA)
- 일정: 2026년 1월 28일(수)
- 장소: 서울역 서울스퀘어 3층 Beijing
- 참고: [https://kor-comp.org/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84](https://kor-comp.org/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84)

### 2026 OECD Global Anti-Corruption & Integrity Forum

'청렴성의 경쟁력: 경쟁력과 번영을 이끄는 힘(The Integrity Advantage: Powering Competitiveness and Prosperity)'을 주제로 공공·민간 사례를 통해 윤리적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 청렴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가치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조명하는 포럼

- 주최: OECD
- 일정: 2026년 3월 23일-27일
- 장소: OECD Conference Centre, Paris(온라인 병행)
- 참고: <https://www.oecd-events.org/gacif>

## 독자 의견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12월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로 개선하려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호에서 다룬 주제 또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 ②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 ③ 기타 의견(다뤘으면 하는 주제, 기업 사례 등)

의견남기기 <https://quiz.assist.ac.kr>

### 2026년 1월 10일(토)까지

(1) '[의견남기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mailto: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기프티콘 추첨에 선정되신 분들은

**김○민님, 박○영님, 이○훈님, 유○열님** 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http://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